

인구감소시대 지역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결정요인 비교분석*

Perceived Regional Disparities and Individual-level Residential Continuity in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 a Comparative Analysis of Determinants in Depopulating and Non-depopulating Areas

김 상 민**·이 성 원***

Kim, Sangmin·Lee, Sungwon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청년 또는 귀농·귀촌인구 유입에만 집중하는 지자체 간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재 거주인구의 정주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다. 이에 광범위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메타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22년 충남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GAMLSS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물리적 주거환경, 자연환경, 지역안전도, 문화·여가 여건, 사회적 관계, 지방정부의 서비스 질 등이 주민의 정주지속성 향상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격차 인식과

* 본고는 강릉원주대학교 2023-2024년도 장기해외파견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제1저자,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논문 접수일: 2025. 5. 12. 심사기간: 2025. 5. 12. ~ 2025. 6. 9. 게재확정일: 2025. 6. 9.

정주지속성 간에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20~30대 청년층에서 지역 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하락 간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청년층의 지역 격차 인식 개선이 청년 인구유출 억제와 지역활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정책적 차원에서 연령별,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별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물리적 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강화, 그리고 격차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주제어: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 지역격차인식, GAMLSS(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모형

This study addresses growing concerns that recent policy responses to local shrinkage and population decline have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municipalities, primarily by focusing on attracting young adults and return migrants. Instead,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xploring alternative strategies that prioritize retaining current residents and sustaining local communities.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and meta-analysis of prior studies, the research identifies key factors associated with residents' willingness to remain in their communities. Using data from the 2022 Chungnam Social Survey and apply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GAMLSS), the study compares the determinants of residential continuity in both depopulating and non-depopulating area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satisfaction with housing conditions, access to natural environments, perceived safety, availability of cultural and recreational amenities, strong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are all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residents' intentions to stay. Notably, perceptions of regional inequality show a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with residential continuity, particularly among individuals in their 20s and 30s living in depopulating areas. This finding underscores the urgent need to address perceived regional disparities in order to stem youth outmigration and promote sustainable local development. Overall, the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age- and region-sensitive policy interventions that not only enhance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ocial cohesion but also actively reduce perceived inequalities, thereby offering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addressing population decline.

□ Keywords: Residential Continuity, Depopulating Area, Perceived Regional Disparities, GAMLSS(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Model

I. 서론

2013년 이후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지속하고 있는 초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인구절벽’, ‘노령화 사회’, ‘지방소멸’ 등 심각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역불균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인구감소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박진경·김도형, 2020).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23년 1월에는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더불어, 지역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 등에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변화,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수립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목표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류영아, 2022; 박관규·주운창, 2022).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지자체 간 경쟁적 인구유입 전략의 구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차등적으로 기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재정지원이 절실한 기초자치단체는 더욱 치열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게 된다.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성과 우수성을 기준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우수 계획을 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다. 문제는 이 과정에 지역 자체의 인구성장 여건을 마련하려는 장기적 대안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득을 끌수있는 타시도 인구유입을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청년중심 인구인구 유입 전략이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고령화와 ‘고령친화’의 스마트 도시 축소라는 방향이 주로 다뤄지지만(Galjaard, 2016), 우리나라처럼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목표로 한 법적 근거와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는 사례는 일본을 제외하면 드물다. 청년 정책은 취·창업지원, 주거·문화·복지 서비스,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청년의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과는 예측만큼 높지 않으며(김정섭 외, 2018), 일부 연구에서는 일시적 유입에 그치고 다시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오히려 ‘유입’보다 ‘정착 및 자립’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한국농어민신문, 2021). 즉,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청년 인구의 유입뿐 아니라 기존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거나 소외를 겪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

한편, 청년인구 유치를 위한 경쟁 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부 지자체는 귀농·귀촌, 대학생 전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유사 정책이나 사업이 차별성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되어 인구를 선점하려는 ‘제로섬’ 게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최민정·백일순, 2023). 청년 유출 문제가 지역활력을 저하시키는 핵심 원인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청년인구를 강제로 지역에 유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결국, 인구는 다양한 지역별 활력과 매력도에 대한 개인의 선택과 기회, 가능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박진경, 2022). 따라서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교통, 환경 등을 포괄하는 지역 매력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인구가 재배치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의 중심을 ‘청년 유입’에 두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현 거주 인구의 정주지속성을 높일 방안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청년인구 유입에 초점을 둔 정책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학술적으로도 청년 및 귀농·귀촌 유입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구체적인 성과 지속성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김정섭 외, 2018). 더 나아가 특정 연령대가 아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차미숙 외, 2022). 무엇보다 지자체들 간 뚜렷한 차별성 없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사업과 인구 쟁탈전인 제로섬 게임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을 전환하여, 현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인구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이동 등의 영향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비인구감소지역 모두에서 주민의 정주지속성 문제는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경제·사회·물리적·환경 격차가 장기적 정주 의사와 관련이 있는지(실질적 측면), 주민들이 인식하는 복합적 격차의 수준이 관련된 것인지(인식적 측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대별 인구구조,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단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향후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인구감소와 지역격차·공간불평등 간의 관계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은 여러 복합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다. 학술적으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적 요인들이 주거이동(internal migration¹⁾)의 주요 원인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개인의 생애주기(life cycle), 학력, 소득, 주거유형, 점유형태(tenure choice), 가구원수 같은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사회·경제·문화적 차이, 지방정부 정책, 그리고 사회적 자본(지역사회 내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이 인구 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산업화 이후 농촌에서 도시로,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이촌향도(離村向都)의 흐름이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 즉 이도향촌(離都向村)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노령층의 농촌 이동(김유하 외, 2023; 이민주·백일순, 2024)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귀농·귀촌 흐름도 확인된다(엄창옥 외, 2018). 특히 소도시나 농촌지역 내에서도 인구 유출과 유입의 차이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장인수, 2023; 정주원·이아라, 2022), 이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김화연·이대웅, 2022).

한국은 그간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혹은 광역적 지역 간 지역격차와 불평등 문제가 확산되었다. 1970년대 산업화를 주도한 중앙 정부는 한정된 자원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72-’81)을 수립하고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성장거점 전략을 시행했다. 이는 국가 전체의 빠른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했으나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82-’91)부터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목표를 세웠고, 「수도권정비계획법」(’82.12.31 제정)으로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01)부터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소극적 전략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정책목표를 확대했으며, 이후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까지 모든 중

1) ‘주거이동’의 개념은 이동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주를 의미하는 ‘international migration’, 국내의 지역 간 이동을 의미하는 ‘internal migration’, 그리고 주로 동일 도시나 지역 내에서의 짧은 이동을 의미하는 ‘residential mobility’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도시 간 비자발적 이주를 줄일 수 있는 정주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역 간 이동인 ‘internal migration’을 주거이동으로 표기하였으나, 주거이동과 관련된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는 공간적 범위를 넘어 포괄적으로 확인했다.

합계획에 균형국토를 목표로 세우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소도시와 농촌은 인구소멸 위협에 직면해 있고, 지역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역격차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교육·의료·주거·물리적 인프라·환경 등 다층적 측면에서 복합적인 공간적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진광(2020)에 따르면, 지역격차는 ‘국가 전체적인 제도나 정책 등을 통해 산출된 편익의 분배 방식으로 인해 초래되는 지역 불평등(regional inequality)’으로 정의된다. 이는 곧 공간정의(spatial justice) 및 공간불평등(spatial inequality)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역격차 문제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등한 분배에 기인하며, 이렇게 확대된 공간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도,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도, 환경적으로 건전하지도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명래 외(2013)와 박인권(2018)은 지역격차를 불필요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기회를 박탈하는 공간적 부정의로 강조한다. 국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격차는 부정의(unjustice)한 현상으로, 공공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소진광, 2020). 이를 위해 공간정의의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문제는 심도깊은 분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거 주로 수도권 대 비수도권, 혹은 광역지역 간 격차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 측면 위주로 다뤘던 지역격차 논의는 이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분석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장·심화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의 공간불평등이 인구변동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전개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장인수, 2023). 이는 지역 간 인구이동 및 인구분포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이러한 불평등은 다시 지역 간 공간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주거환경적, 자연환경적 측면에서의 격차와 공간불평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인구감소라는 인구변동이 지역 간 격차와 어떻게 관련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정책적인 논의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개발과 실행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인구감소지역에서 외부 인구 유입이 우선적 정책 목표로 떠오르는 것은, 지자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역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는 현 거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지역의 매력을 높여 외부 인구유입을 촉진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여건을 개선하는 복합적 과제와 연결된다. 살고 싶은 곳, 매력적인 지역으로의 전환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인구유출 방지나 정주지속성 향상과 직결된다. 즉, 지역 주민들이 지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은 외부 유입뿐 아니라, 내부 이탈을 막는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정주(settlement)’란 ‘특정한 환경을 가진 장소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주지속(residential continuity)’은 ‘지속’이라는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며, 그 지역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착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주로 ‘정주의식(settlement consciousness)’(강영웅 외, 2020; 김형준, 2021; 김호·남영숙, 2017; 민소영·신서우, 2022; 이희창 외, 2004; 최일진·남황우, 2015), ‘정주의사(settlement intention)’(김화연·이대웅, 2022), 또는 ‘(지속/계속) 거주의향’(김지현·강수진, 2021; 박다현 외, 2024; 오미영, 2008; 이경영 외, 2018; 이경영·정보영, 2024; 이향미, 2019; 최영출, 2019)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의향’은 장기 거주와 정착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정주의식’과 ‘정주의사’ 그리고 ‘정주의향’을 모두 포괄한 용어로 ‘정주지속’이라는 용어를 채택한다. 이는 ‘주거이동(internal migration)’과 상반된 개념으로써 ‘기간’에 초점을 맞춰 ‘지역 내에서 장기간 계속 거주하며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역에 장기간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 즉 ‘정주지속성’은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 의향도 높아지는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기도 한다(김수영 외, 2017; 이제문·이한민, 2023; 전영옥·박세진, 2024). 반대로, 정주 의향이 낮다는 것은 이주 또는 떠날 의향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김화연·이대웅, 2022; 이지은·이경은, 2020; 이희창 외, 2004).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지속성은 그들이 인식하는 지역 간 격차, 즉, ‘격차인식’과도 연결될 수 있다. 비록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에 경제·사회·물리적·환경적 측면의 실질적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거나 혹은 인식하는 격차의 정도에 따라서 주민들의 정주의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격차 인식이 거주민들의 정주지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Stark(1978, 1991)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주거이동이 절대적 격차보다는 상대적 격차 즉, ‘빈곤이나 제약 등이 비슷한 가구와 비교했을 때의 박탈감’에 의해 촉진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동이동의 신경제이론(New Economics of Labor Migration: NELM)’으로 불리며, 거주지 내 상대적 박탈감이

중요한 주거이동 요인임을 강조한다. 이후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자가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를 출간했다(Bhandari, 2004; de Hass, 2010; 2021; Stark & Taylor, 1989; Quinn, 2006; Schewel, 2019; Stark et al., 2009). 비록 이 이론이 정주지속성보다는 주거이동에 주목한 측면이 있지만, 인지적 격차가 정주지속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인식적 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인식적 격차 수준과 주민의 정주지속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연구들이 다루었던 지역단위의 물리적·문화적·자연적 환경, 지방정부 정책, 사회적 자본 등의 실질적 차이뿐 아니라, 주민들이 인지하는 지역 간 격차인 ‘격차 인식’도 정주의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연령별로 집단을 나누어 정주의향과 격차인식 간의 한계효과를 분석하여, 격차인식에 민감한 특정 연령집단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삼는다. 이러한 분석은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비인구감소지역에서도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정주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에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3. 정주지속성과 주거이동

이 연구의 핵심 종속변수인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령층의 정주지속성을 의미하는 ‘Aging in Place (AIP)’를 제외하고, 국제연구에서 모든 연령을 아우르는 ‘정주지속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는 어렵다. 대신, ‘정주지속성’의 반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주거이동’을 종속변수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마저도 중국 도시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들을 제외하고 2000년대 초 연구까지만 주로 확인된다. 해외의 경우 ‘정주지속성’의 원인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비자발적’ 주거이동을 줄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그 원인분석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게다가 논리적으로 주거이동을 줄이는 요소가 곧 정주지속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동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 행태의 한계를 지적한 Haas(2021)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기존의 주거이동 연구들이 주로 이동의 배출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가 ‘흡입’ 즉, 유입 요인까지 추가한 경우가 있지만, ‘정주’를 포괄한 이동의 전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외 많은 연구들이 ‘주거이동’ 결정요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왔다. 다만 국내 연구에서는 ‘정주지속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인구학, 사회학, 행정학,

도시계획학, 등 다방면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이유로 기존연구 중 ‘정주지속성’과 ‘주거이동’ 결정요인 연구들을 함께 검토한다.

이주의향 혹은 정주지속성의 결정요인으로 크게 개인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 즉 소득, 직업, 학력, 가족구성 등이 관련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 정책, 공공서비스, 물리적 환경 등이 관찰된다. 초기 연구들은 임금격차(wage gaps)나 고용기회와 같은 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주거이동을 설명했으며, Ravenstein(1889)을 시작으로 Stouffer(1940)와 Zipf(1946)의 ‘중력모형(gravity model)’과 Lee(1966)의 ‘배출흡입모형(push and pull model)’ 등을 통해 지역 간 인구이동 분석방법이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신고전모형들은 절대적 소득, 임금, 고용기회 등 노동시장 요소들이 이주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은 주로 경제적 격차의 해소에서 비롯된다고 본다(Greenwood, 1975; Harris & Todaro, 1970; Sjaastad, 1962; Todaro, 1969).

이후, 인구 이동의 동기와 원인을 설명하는데 미래의 기대효용과 투자적 관점이 반영되면서, 주거이동은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장래 기대수익도 중요한 결정요인(Anthony & Thurston, 1976; Bowle, 1970; 김화연·이대웅, 2022 재인용)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개인이 효용극대화(utility maximization)를 위해 경제적 이득이나 미래 가치를 고려하여 이주를 결정한다는 관점으로, 연령, 교육수준, 가족구성, 생애주기 등 개인 특성과 관련이 깊다(Hugo, 1981; Leslie & Richardson, 1984; Massey et al., 1993; McAuley & Nutty, 1982).

그러나 개별가구 요인뿐 아니라 지역 특성도 정주나 이주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공재(비배제성, 비경합성)의 비효율적 배분을 주장한 Samuelson(1954; 1955; 1958)의 주장에 반박하며, Tiebout(1956)는 가장 만족스러운 집합재(지역 공공재 묶음, collective goods)를 가진 지역(community)을 개별가구가 선택(Tiebout Sorting)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공공재는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물리적 환경, 공공서비스 수준이 주민의 이주나 정주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여러 연구들이 지자체의 교육부문 지출(Hoxby, 1999; Nechyba, 1999; 2000), 지방세(Brueckner, 2000), 조닝차이(Fernandez & Rogerson, 1997)와 같은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들이 ‘발로 투표한다(voting with one's feet)’는 것을 증명했고, 지역특성과 개인 요인을 함께 고려한 실증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Bolan, 1997; Briggs, 1997; Feldman, 1990; Seek, 1993; Woolever, 1992).

4. 정주지속성 결정요인의 종합적 검토(Meta Analysis)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활용한 다양한 변수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 위해 탄력성(Elasticity) 기반의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수행했다. 탄력성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계수값을 모두 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각 변수와의 관계를 동일한 잣대(%증가)로 비교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법은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집약하여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메타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표 1〉은 국내 연구들의 정주지속성 관련 결정요인별 추정 탄력성으로, 각 연구에서 제시한 요인별 계수값(Coefficient)과 논문에서 제시한 기초통계값으로 재계산²⁾한 후 그 값을 다시 평균과 표준편차로 요약한 통계치다. 이 통계치는 기존연구 결과들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통계치는 로짓 계열(logit type)의 탄력성과 일반 선형모형(linear type)의 탄력성을 구별하여 정리했다. 이와함께, 모형에 관계없이 모든 요인별 탄력성을 평균과 표준편차로 정리한 것이 전체(total) 효과이다(표 1). 다만 종속변수인 정주지속성에 대한 기간의 정의가 연구별로 1년, 2년, 4년, 5년, 10년 등 상이했고, 지역, 시기, 대상(전체 주민, 노인, 청년, 출신지와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 등), 표본크기, 분석모형이 달라 각 요인별 탄력성의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표로 정리하지 못한 연구도 많았는데, 기초통계값을 제시하지 않아 탄력성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했다.

2) 분석에 활용한 개별 논문은 본 연구 마지막 〈부록1〉에 추가함.

〈표 1〉 메타분석 결과: 정주지속성의 요인별 탄력성 평균(Mean) 및 표준편차(S.D.)*

영역	세부영역	분류**	전체 탄력성		통계적으로 유의한 탄력성		
			Mean	S.D.	Mean	S.D.	Mean±S.D.
삶의 질		Total	0.687	0.320	0.687	0.320	+0.367 ~ +1.007
		Linear Type	0.569	0.346	0.569	0.346	+0.222 ~ +0.915
		Logit Type	0.924	-	0.924	-	-
경제적 측면		Total	0.183	0.225	0.251	0.216	+0.034 ~ +0.467
		Linear Type	0.176	0.132	0.176	0.132	+0.044 ~ +0.308
		Logit Type	0.185	0.268	0.301	0.275	+0.026 ~ +0.576
주거 및 생활환경	주거환경 (물리적 환경)	Total	0.174	0.297	0.298	0.248	+0.050 ~ +0.546
		Linear Type	0.143	0.163	0.232	0.153	+0.079 ~ +0.385
		Logit Type	0.188	0.349	0.331	0.292	+0.039 ~ +0.623
	문화·여가	Total	0.093	0.132	0.065	0.140	-0.075 ~ +0.205
		Linear Type	0.085	0.056	0.082	0.075	+0.007 ~ +0.157
		Logit Type	0.102	0.193	0.209	0.228	-0.019 ~ +0.437
	의료	Total	0.259	0.301	0.607	-	-
		Linear Type	-	-	-	-	-
		Logit Type	0.259	0.301	0.607	-	-
	재난안전	Total	0.316	0.861	0.582	0.830	-0.248 ~ +1.411
		Linear Type	-	-	-	-	-
		Logit Type	0.316	0.861	0.582	0.830	-0.248 ~ +1.411
	자연환경	Total	0.240	0.451	0.338	0.548	-0.211 ~ +0.886
		Linear Type	0.017	0.004	0.020	-	-
		Logit Type	0.468	0.594	0.665	0.688	-0.023 ~ +1.353
사회관계: 사회적 자본		Total	0.180	0.525	0.216	0.573	-0.358 ~ +0.789
		Linear Type	-	-	-	-	-
		Logit Type	0.180	0.525	0.216	0.573	-0.358 ~ +0.789
정부역할		Total	0.233	0.170	0.206	0.231	-0.025 ~ +0.437
		Linear Type	0.043	-	0.043	-	-
		Logit Type	0.328	0.059	0.370	-	-
지역격차 인식		Total	-0.364	-	-0.364	-	-
		Linear Type	-	-	-	-	-
		Logit Type	-0.364	-	-0.364	-	-

* 요약치로 활용한 요인별 기존연구의 원계수 및 본 연구에서 추정한 탄력성 값 전수는 본 연구 마지막 부분의 〈부록1〉에 수록함.

** 각 요인별 탄력성 전체를 분석한 것이 'Total', logit이나 probit 계열의 모형들을 'Logit Type', 그 이외 linear모형으로 볼 수 있는 모형들의 탄력성이 'Linear Type'임. 'Logit Type'과 'Linear Type'은 해석이 다른데, 각각의 요소가 1% 증가할 때, 전자는 오즈비(odds ratio)가 몇% 증가하는지 반면 후자는 종속변수가 몇% 증가하는지로 해석됨. 순서형 로짓(Ordinal Logit)은 종속변수의 각 단계가 증가할 때마다 각각의 탄력성을 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평균값을 탄력성으로 산정함.

우선 삶의 질을 변수로 사용한 연구(박다현 외, 2024; 유나영 외, 2022; 전영옥·박세진, 2024)는, 삶의 질이 지역 수준과 개인 차원을 아우르는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어 정주 지속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다만, 구조방정식(2SL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합(lum-sum) 변수로서의 삶의 질 전체값보다는 세부 요인별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실증분석 모형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역단위의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제외하고 정주지속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2017년 춘천시 사회조사(표본 1,000)를 이용한 이항미(2019)의 연구에서 직장만족도가 1% 증가하면, 정주지속성의 확률이 약 0.62% 높아졌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른 로짓 계열 연구들(0.1~0.2%)이나, 선형모형 연구(약 0.08%)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주거 및 생활환경의 결정요인은 포괄적으로 연구되어 온 편인데, 주택이나 교통 등의 물리적 인프라 이외에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보건·복지 서비스 및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정주 지속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한 연구들이 한 축을 이룬다(김수영 외, 2017; 김용진·김성희, 2016; 박해금, 2018; 송홍수 외, 2015; 이지은·이정은, 2020; 이희창 외, 2004). 김수영 외(2017) 연구는 구조방정식(PROCESS macro)을 이용하여, 주거환경(탄력성 약0.24)과 대중교통(약0.11)의 만족도와 정주지속성 간에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문화시설수(탄력성: 약0.03)나 공원시설수는 정주의식과 각각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만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역의 문화 및 여가생활 여건, 의료 및 보건복지, 교육여건 등과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발표되었다. 기초통계량이 없어 탄력성 계산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박해금(2018)은 주택과 함께 보건·복지 만족도가 정주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비록 주거이동에 관한 종속변수의 연구지만 서라벌·성욱준(2019)은 문화시설, 복지시설, 재난/안전, 교통을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로 포괄하면서, 이들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질(탄력성 약-0.04)이 이주의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경기도를 대상으로 실증하고 있다. 강영웅 외(2020)는 교육복지(탄력성: 약 0.29), 지역경제(약0.11), 환경(약0.18), 교통통신(약0.26), 지방행정(약0.37)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공급수준이 주민의 정주지속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적 자본도 정주지속성과 관련이 있다(이경환, 2008; 김영주·유병선, 2012; 이경영·정문기·정예은, 2018). 예를들어, 이경환(2008)의 서울시 12개 행정동 대상 연구에서 주민의 소속감(탄력성 약 -1.55)과 이주의사간의 관계를 확인했으며, 이경영 외(2018)도 사회적 자본(약0.17)이 정주지속성과 의미있게 연결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부 연구결과를 보면 차이도 크다. 김영주·유병선(2012)은 광주 55개 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을 자치활동참여, 자치활동만족도, 동네관심도로 나누어 이주의사와 관련성을 분석

했는데, 동네관심도(탄력성 약-0.07)만 이주의사와 유의미한 부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소는 무관했다. 다수의 연구에서 신뢰와 참여는 정주와 긍정적 관련이 높지만, 네트워크(교류)는 오히려 부정적 관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장명준(2024) 연구는 네트워크와 정주지속성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했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고은아(2023)와 정찬우·한창근(2021)의 연구에서는 각각 약-0.13, -0.05의 부정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한편,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정주지속성의 결정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강영웅 외(2020)는 지방행정(탄력성 약0.37), 이희창 외(2004)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약 0.05)이 정주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지방정부의 역량 및 정책수단과 이사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김태형(2022) 연구는 전국 387개의 과소표본으로 0 이하 값이 없는 종속변수를 일반선형으로 분석한 연구로 분석모형에 문제가 있어 탄력성으로 정리하지 않았으나, 지방정부 역량과 이주의향 간에 관련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근 지역격차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주지속성에 주목한 연구도 부족하지만 존재한다. 김호·남영숙(2017)은 대전과 전남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439명)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인식을 정성적 방법으로 비교하고 감정적·이성적·판단적 인식으로 구분·분석하여, 도시(대전)지역 학생은 삶의 질과 정주의식 간의 관련성이 높은 반면, 농촌(전남)지역은 지역 애착과 자긍심과의 관련성을 확인했다. 한편 유나영 외(2022)는 지방소멸 위기감(탄력성 약-0.46)과 사회경제적 기회의 격차 인식(약 -0.36)이 정주지속성과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인식하는 격차가 클수록 정주 의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인식하는 격차 정도, 즉 인식적 격차가 정주지속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변수임을 가정하는데, 이 연구들이 국내에서 실제로 인식적 격차에 따른 정주/이주와 관련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 만약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에 실질적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체감하거나 혹은 인식하는 격차의 정도에 따라서 주민들의 정주의향과 정주지속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인구 및 거주 특성별 관련성 차이도 여러 연구에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최근,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지은·이경은(2020)은 연령별로 생활여건, 경제, 보건·복지, 교육, 문화 만족도와 정주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했고, 그 결과 청년 집단은 교육환경 만족도가, 중장년 집단은 보건·복지환경 만족도가, 노년집단은 경제환경 만족도가 정주의도와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준(2021)은 1인가구의 정주 지속성에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으며, 강원지역 사례(김화연·이대웅, 2022)에서는 출신지역과 거주지역이 일치할 경우 자연환경 만족도가 정주 탄력성과 밀접(약 1.15)한 관련이 있다는 독특한 지역적 특수성도 관찰되었다. 이들 연구는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인구 및 거주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다양한 인구 및 거주특성

에 따른 관련성을 세밀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분석 결과는 이후 본 연구의 정주지속성 요인별 세부 결과를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활용된다.

III.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1. 연구모형

앞서 검토한 것처럼 지역 주민의 정주지속성(혹은 주거이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검증되어 왔으며, 현 시점에는 선행연구들의 다양한 분석관점을 종합한 복합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즉, 그간 선행연구에서 검증해왔던 정주지속성 관련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되, 지역주민의 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남사회조사(2022)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그 변수 중 ‘10년 이후에도 해당 시군에 계속거주하고 싶은 의향’을 정주지속성으로 정의하고,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요소 중 사회조사에 포함된 경제적 특성을 비롯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 사회관계, 정부역할, 지역격차인식 등을 활용한다(표 2). 특히 최근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등장한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에 따라 지역의 사회·경제·정책 및 지역격차와 정주지속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지역격차 및 공간불평등 지표구성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경제적 측면	소득/소비	임금/소득, 소득 및 소비 만족도
	근로여건	업무특성, 근로시간, 근무환경,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고용안정성, 일/직장 장래성
주거 및 생활환경	주거환경 여건	주택, 쇼핑시설 이용, 공공시설 이용, 휴식공간 이용, 기반시설, 주차장 이용 만족도
	문화·여가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전반적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의료	의료기관(의사수, 병상수, 병원수), 의약품판매업소, 의료시설 이용 평가
	재난·안전	화재발생 건수, 범죄발생 건수, 지역주민의 재난안전 인식
	자연환경	미세먼지 농도, 공원·녹지 면적, 수질·토양·공기질 등에 대한 주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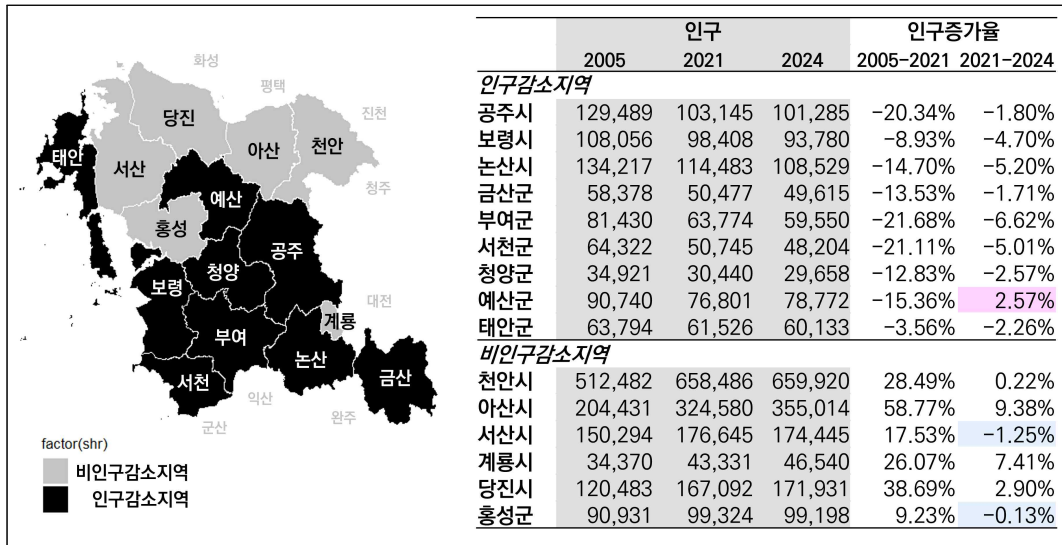
영역	세부영역	지표구성
사회관계	사회적 자본	동네에서 서로 잘 알고 지냄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 동네 각종 행사, 모임에 참여 정부 신뢰(중앙정부, 충청남도, 거주시군)
정부역할	사회복지	독거노인현황, 장애인등록자, 저소득/한부모 가족, 기초생활대상자 비율, 사회복지 예산비중, 사회복지시설수 사회복지 시설이용 만족도
지역격차 인식	지방 재정	지방소멸 위기감과 사회경제적 기회의 격차

2. 분석범위 및 자료

지역격차와 정주지속성의 관계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 간 비교분석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정주지속성을 조사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전국 단위 국가공인통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을 분석의 공간적 범위로 한정한다. 충청남도는 2012년 이후 매년 3만명 정도의 표본추출을 통해 충남사회지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사 설문항목에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항목(삶의 만족도, 주거 및 물리적 환경, 자연환경, 문화여가 접근성, 사회안전, 사회적연결망, 지방정부정책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2년도 충남사회조사 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충청남도는 현재 전체 15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2021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9개 시군(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과 6개 비인구감소지역(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으로 구분된다. 지자체별 인구 및 인구변화 추세는 〈그림1〉과 같으며, 2021년 이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군은 최근 인구가 조금 증가했으며 서산시와 홍성군은 2021년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15개 충청남도 시군을 크게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 지역 거주여건에 대한 평가 및 격차 인식 차이, 그리고 이들과 지역주민의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분석대상지역 및 인구 및 인구변화(주민등록기준)



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정주지속성과 인식적 격차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가구단위의 변동성을 통제한다. 성별, 연령, 혼인여부, 교육수준, 소득, 주택형태, 점유형태, 거주기간, 가구원수, 도시/농촌 여부 등을 개인수준의 통제변인으로 모형에 넣었다. 지역단위의 주거·교통·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문화·여가, 사회복지, 의료, 교육, 지방정부 정책 등은 충남사회조사(2022)에서 다양한 변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활용하여 〈표 2〉에서 제시한 요인으로 요약하고 변수의 적절성을 검증한다. 종속변수로 활용한 정주지속성은 구체적으로 10년후 현재 거주하는 시군에 정주할 의향에 대한 답변으로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가진다. 이러한 순서형 자료를 종속변수로 분석할 경우 순서형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이 가장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순서형 로짓으로 분석했으나, brant 검증으로 확인한 순서형 로짓의 비례오즈가정(proportional odds assumption)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기존 연구들 대부분이 비례오즈관련 검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비례오즈가정을 위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AMLSS³⁾(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로 분석하며 5점 척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연계함

3) Rigby & Stasinopoulos (2005) 연구에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음.

수를 음이항(negative binomial) 분포로 활용한다. GAMLSS는 종속변수의 평균뿐만 아니라 변동성과 다른 분포적 매개변수를 모델링할 수 있는 통계적 방법으로, 음이항 분포를 적용하여 데이터의 분산이 평균보다 현저히 큰 과산 포아송(overdispersed poisson) 이슈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brant 검증을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순서형 로짓 결과를 <부록 2>에 수록하여 GAMLSS 결과 및 기존연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한편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의 정주지속성 관련 요인 비교를 위해 지역단위의 인구감소지역 여부(D)의 터미변수와 함께 다양한 지역단위 요인들과 터미변수 간의 교호(작용)항 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시켰다. 아래 <식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단위 변수인 x_1 과, 터미변수 D와 함께, 교호작용항 $D \cdot x_1$ 이 모형의 독립변수이며 그 계수값을 각각 β_1 , β_2 , β_3 라 하면, x_1 과 $D \cdot x_1$ 을 x_1 으로 묶을 수 있다(식 2). 이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D값이 1이 되므로(식 3),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단위 변수(x_1)의 계수는 β_1 과 β_3 를 합한 값이 된다. 이때 β_2 는 비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D값이 0이 되므로(식 4), 비인구감소지역의 지역단위 변수(x_1)의 계수는 β_1 값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text{연구모형: } y = \alpha + \beta_1 \cdot x_1 + \beta_2 \times D + \beta_3 \times D \cdot x_1 + \cdots + \varepsilon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 \alpha + (\beta_1 + \beta_3 \times D) \cdot x_1 + \beta_2 \times D + \cdots + \varepsilon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단, y: 종속변수인 정주지속성,

x_1 : 주거환경 만족도, ..., 지역격차인식, 등 지역단위 변수 중 하나,

D: Dummy 변수 (인구감소지역: 1, 비인구감소지역: 0),

$D \cdot x_1$: 교호(작용)항(상호작용항)

∴ if D=1(인구감소지역),

$$y = \alpha + (\beta_1 + \beta_3 \times 1) \cdot x_1 + \beta_2 \times 1 + \cdots + \varepsilon \quad \langle \text{식 3} \rangle$$

→ x_1 의 계수값: $\beta_1 + \beta_3$,

β_2 : 참조집단(비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의 전체효과

if D=0(비인구감소지역),

$$y = \alpha + (\beta_1 + \beta_3 \times 0) \cdot x_1 + \beta_2 \times 0 + \cdots + \varepsilon \quad \langle \text{식 4} \rangle$$

→ x_1 의 계수값: $\beta_1 + 0 = \beta_1$,

β_2 & β_3 : D가 0이므로 사라짐

IV. 분석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2022년 충남사회지표조사 총 응답자 중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 중 결측치를 제외한 응답자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체 응답자는 총 5,913명이며, 이중 비인구감소지역 거주자가 2,882명(48.7%),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3,031명(51.3%)이다. 연령 분포를 보면, 두 지역 모두 60세 이상 응답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40~60대가 약 24~30%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60세 이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0.7%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난다. 소득수준의 경우 비인구감소지역은 500만원 이상 응답자가 전체의 37.1%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0~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22.4%, 500만원 이상(19.5%), 200~300만원 미만(17.9%) 순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비인구감소지역 응답자 중 47.9%가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고졸 이하’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이상’은 28.2%였다.

<표 3> 응답자 특성

항목	비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응답자 수	2,882(48.7%)					3,031(51.3%)				
대상 시군	천안시		825 (28.6%)			공주시		407 (13.4%)		
	아산시		389 (13.5%)			보령시		400 (13.2%)		
	서산시		533 (18.5%)			논산시		342 (11.3%)		
	계룡시		263 (9.1%)			금산군		323 (10.7%)		
	당진시		419 (14.5%)			부여군		327 (10.8%)		
	홍성군		453 (15.7%)			서천군		357 (11.8%)		
정주지속성 (10년 후 거주 시군 정주 의향)	전혀 거주X		그저 그렇다			전혀 거주X		그저 그렇다		
	64 (1.1%)		555 (9.4%)			65 (1.1%)		421 (7.1%)		
	별로 거주X		그렇다			별로 거주X		그렇다		
	249 (4.2%)		1,364 (23.1%)			165 (2.8%)		1,324 (22.4%)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650 (11.0%)		1,056 (17.9%)			1,056 (17.9%)		1,056 (17.9%)		

항목		비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성별	남자	1,585 (55%)	1,545 (51%)
	여자	1,297 (45%)	1,486 (49%)
연령	20대	187 (6.5%)	103 (3.4%)
	30대	391 (13.6%)	200 (6.6%)
	40대	763 (26.5%)	473 (15.6%)
	50대	685 (23.8%)	717 (23.7%)
	60세 이상	856 (29.7%)	1,538 (50.7%)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53 (5.3%)	490 (16.2%)
	100~200만원 미만	325 (11.3%)	678 (22.4%)
	200~300만원 미만	441 (15.3%)	542 (17.9%)
	300~400만원 미만	492 (17.1%)	429 (14.2%)
	400~500만원 미만	402 (13.9%)	302 (10%)
	500만원 이상	1,069 (37.1%)	590 (19.5%)
교육수준	초졸 이하	351 (12.2%)	834 (27.5%)
	중졸 이하	215 (7.5%)	406 (13.4%)
	고졸 이하	935 (32.4%)	937 (30.9%)
	대학 이상	1,381 (47.9%)	854 (28.2%)
주거형태	단독주택	925 (32.1%)	1,848 (61%)
	아파트	1,771 (61.5%)	874 (28.8%)
	연립주택	55 (1.9%)	166 (5.5%)
	다세대 주택	69 (2.4%)	91 (3%)
	기타	62 (2.2%)	52 (1.7%)
점유형태	자가	2,090 (72.5%)	2,515 (83%)
	그 이외	792 (27.5%)	516 (17%)
배우자 유무	없음	644 (22.3%)	749 (24.7%)
	있음	2,238 (77.7%)	2,282 (75.3%)
시군 거주기간	5년 미만	251 (8.7%)	142 (4.7%)
	5~10년 미만	290 (10.1%)	145 (4.8%)
	10~15년 미만	283 (9.8%)	164 (5.4%)
	15~20년 미만	192 (6.7%)	100 (3.3%)
	20년 이상	1,866 (64.7%)	2,480 (81.8%)
동-읍-면	동부	1,376 (47.7%)	655 (21.6%)
	읍부	577 (20%)	1,091 (36%)
	면부	929 (32.2%)	1,285 (42.4%)

주거형태의 측면에서는, 비인구감소지역에서는 61.5%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반면, 인구감소 지역은 61%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 주거유형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다만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소유 비율은 각각 72.5%와 83%로 응답자 상당수가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주기간을 보면, 두 지역 모두 20년 이상 거주하는 응답자가 많으며(비감소지역 64.7%, 감소지역 81.8%), 장기 거주자의 비율이 높다. 특히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년에서 10년 미만 거주하는 비율이 10.1%로 다른 항목보다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구분(동-읍-면)의 경우, 비인구감소지역은 읍 또는 동 지역의 거주자가 전체의 약 절반인 47.7%를 차지한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면 지역 거주자가 42.4%, 읍 지역이 36%로,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은 읍부와 면부에 거주하는 특징을 보인다.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지역 주민의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다(표 4). 탐색적 요인분석은 충남사회조사를 통해 측정된 개별 항목들이 구성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내적인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Varimax)회전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총 52개 설문 항목에서 12개의 요인을 추출했다.

이 과정에서 KMO(Kaiser-Meyer-Olkin) 값은 0.91로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은 적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세부 요인별 요인 부하값은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외하면 0.53에서 0.93 사이에 분포하며, 고유값 역시 모두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사회과학연구에서 KMO 값이 0.5 이상이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이훈영, 2012), 요인 부하값이 0.5 이상이고 고유값이 1 이상이면 내적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본다(이학식·임지훈, 2017; 이경영·박관태, 2022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은 전체적으로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충남사회지표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항목이 단 1문항에 불과하며, 요인 부하값도 0.470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정주지속성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11개 요인에 대해 신뢰도 분석(Cronbach's α)을 수행했다. 신뢰도 검증은 각 요인을 구성하는 개별 변수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과학기준 알파(α) 값이 0.6 이상이면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George and Mallery, 2003; 이경영·박관태, 2022 재인용). 본 연구의 결과, 모든 세부요인에서 Cronbach's α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12개 구성요인을 세부요소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여건, 소득/소비 여건, 자연환경, 주거환경 여건, 문화·여가 여건, 지역안전도, 사회적 관

계, 정부신뢰, 지역복지정책, 의료서비스, 지역격차 인식으로 명명했다(표 4).

〈표 4〉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구성요인	측정변수	요인부하 Factor-loading	측정변수	요인부하 Factor-loading	고유값 eigen-value	신뢰계수 Cortad's α
근로여건	일의 내용	0.81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79	5.90	0.93
	임금/소득	0.73	고용 안정성	0.80		
	근로 시간	0.81	직장에서의 장래성	0.81		
	근무 환경	0.83	전반적인 만족도	0.89		
소득/소비 여건	소득 만족도	0.79	소비생활 만족도	0.78	1.48	0.81
자연환경	대기	0.80	소음/진동	0.78	4.45	0.92
	수질	0.80	녹지환경	0.79		
	토양	0.80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0.84		
주거여건	주택	0.53	휴식공간 이용	0.75	3.67	0.87
	쇼핑시설 이용	0.79	기반시설	0.75		
	공공시설 이용	0.79	주차장 이용	0.64		
문화·여가 여건	문화여가시설 접근성 및 충분 정도	0.89	전반적 여가 활동	0.89	1.79	0.94
지역안전도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0.70	정보보안(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등)	0.77	5.68	0.9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등)	0.73		신종전염병		
	교통사고	0.73	범죄 위험	0.77		
	화재	0.77	전반적인 사회 안전	0.82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0.75				
사회적 관계	동네에서 서로 잘 알고 지냄	0.91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움	0.93	3.67	0.96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0.93	동네 각종 행사, 모임에 참여	0.91		
정부 신뢰	중앙정부 신뢰	0.84	거주시군 신뢰	0.86	2.44	0.89
	충청남도 신뢰	0.92				
지역 복지정책	임신출산육아 정책 만족도	0.88	취약계층 복지정책 만족도	0.88	1.67	0.84
의료 서비스	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0.47	-	-	1.19	
지역격차 인식	소득 임금 격차	0.70	교육기회 불평등	0.66	4.98	0.90
	자산 격차	0.72	지역간 발전 불균형	0.77		
	취업, 일자리 기회 불평등	0.75	여가문화 향유 기회 불평등	0.74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0.76	주거환경 격차	0.78		
	세대간 격차	0.75				

주: 의료서비스만족도는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음.

KMO= 0.91, bartlett 구형성 검정= 220,352.2 (df=1431, p=.000***)

3. 정주지속성과 다양한 요인 간의 상관관계(GAMLSS)

먼저 개별 가구수준의 통제변인은 기존연구와 대부분 합치했다. 성별은 정주지속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20대에는 상대적으로 주거이동이 활발한 반면, 30대부터 60대로 증가할수록 정주지속성이 조금씩 증가하는 비선형관계가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별 더미 변수(연령군 구분 더미)를 통제변수로 활용했다. 혼인 여부는 정주지속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거이동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그룹과 가장 높은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그룹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소득 수준은 전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거이동 확률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비선형 관계도 함께 확인되어, 연령처럼 소득집단별 더미 변수를 사용했다.

가구단위 통제변인은 <표 5>의 GAMLSS 결과와 <부록 2>의 순서형 로짓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 다만, 소득 간 차이는 로짓결과가 모든 소득집단별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반면 GAMLSS 결과로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최하위그룹과 500만원 이상의 그룹간 차이만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아파트 거주 가구는 기타 유형에 비해 정주보다 주거이동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연구들과 달리 자가·차가 차이에 따른 점유형태와 정주 이동성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주지속성이 높았으며, 도시지역인 동지역보다 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정주 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도 확인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비도시지역의 인구 유출이 도시지역에 비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농촌지역의 점진적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도시 내 이동이 활발하고, 농촌에서는 오히려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지역단위 요소들이 정주지속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특히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간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여부(a)에 대한 해석은 교호항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어, 먼저 지역특성 변수의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표 5>의 모형 1과 2에는 각각의 탄력성 모형(1e, 2e)을 추가했는데, 이는 앞서 정리한 기존연구 탄력성과 결과를 비교하고 각 요소별 정책효과 수준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먼저 교호항을 제외한 모든 지역단위 변수들은 모든 모형(표 5)에서 정주지속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 격차인식을 제외한 모든 요소는 정주지속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지역격차 인식을 인지하는 경우 정주지속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음의 상관관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격차인식이 클수록 정주 의지가 저하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표 5〉 정주지속성 결정요인 분석(GAMLSS, link function: 음이항 분포)

변수 [†]	Model 1 [†]		Model 1e [†]		Model 2 [†]		Model 2e [†]	
	Coef.	t-value [‡]	Elasticity	t-value [‡]	Coef.	t-value [‡]	Elasticity	t-value [‡]
Intercept	1.278	55.51 ***	-4.915	-18.41 ***	0.758	18.88 ***	-4.885	-12.92 ***
[개별가구의 통제변인]								
성별	0.005	0.77	0.005	0.63	0.004	0.59	0.003	0.47
연령: 20대	-0.171	-8.98 ***	-0.200	-9.63 ***	-0.175	-9.19 ***	-0.204	-9.83 ***
30대	-0.074	-5.07 ***	-0.083	-5.24 ***	-0.076	-5.18 ***	-0.084	-5.34 ***
40대	-0.056	-4.79 ***	-0.061	-4.81 ***	-0.055	-4.72 ***	-0.060	-4.76 ***
50대	-0.036	-3.49 ***	-0.038	-3.39 ***	-0.035	-3.41 ***	-0.037	-3.32 ***
혼인여부	0.008	0.79	0.009	0.80	0.007	0.64	0.007	0.61
교육수준: 중졸 이하	0.005	0.38	0.000	0.01	0.006	0.50	0.002	0.15
고졸 이하	-0.008	-0.71	-0.015	-1.13	-0.007	-0.58	-0.013	-0.99
대학 이상	-0.048	-3.60 ***	-0.063	-4.41 ***	-0.045	-3.44 ***	-0.060	-4.19 ***
소득: 100~200만원	-0.015	-1.17	-0.013	-0.92	-0.013	-0.99	-0.010	-0.74
200~300만원	-0.016	-1.18	-0.013	-0.88	-0.015	-1.07	-0.012	-0.78
300~400만원	-0.030	-2.03 **	-0.026	-1.65 *	-0.027	-1.87 *	-0.023	-1.46
400~500만원	-0.016	-1.00	-0.013	-0.75	-0.015	-0.92	-0.011	-0.63
500만원 이상	-0.036	-2.42 **	-0.037	-2.29 **	-0.034	-2.33 **	-0.035	-2.18 **
주택유형: 아파트	-0.031	-3.62 ***	-0.037	-4.03 ***	-0.031	-3.61 ***	-0.036	-3.93 ***
점유형태: 자가	0.002	0.27	0.003	0.30	0.003	0.38	0.004	0.42
거주기간	0.033	11.70 ***	0.104	11.99 ***	0.033	11.64 ***	0.103	11.93 ***
가구원수	0.009	0.80	0.015	0.82	0.009	0.82	0.015	0.82
지역: 읍	-0.002	-0.20	0.002	0.22	0.000	0.02	0.005	0.49
면지역	0.018	1.94 *	0.024	2.35 **	0.018	1.92 *	0.023	2.33 **
[지역특성]								
(인구)감소지역 (a)	-0.017	-2.32 **	-0.021	-2.62 ***	-0.009	-0.20	-0.179	-0.36
소득 및 일자리								
근로 여건 (b)	0.037	5.40 ***	0.089	5.13 ***	0.029	3.06 ***	0.066	2.68 ***
소득·소비 여건 (c)	0.025	3.73 ***	0.062	3.76 ***	0.031	3.24 ***	0.070	2.90 ***
주거 및 생활 환경								
주거환경 여건 (d)	0.111	16.83 ***	0.300	17.80 ***	0.104	11.10 ***	0.281	11.59 ***
문화·여가 여건 (e)	0.055	8.45 ***	0.154	9.35 ***	0.062	6.45 ***	0.177	7.16 ***
의료서비스 여건 (f)	0.050	7.62 ***	0.135	7.43 ***	0.054	5.34 ***	0.155	5.15 ***
지역 안전도 (g)	0.077	11.76 ***	0.194	11.52 ***	0.079	8.65 ***	0.201	8.44 ***
자연 환경								
자연환경 여건 (h)	0.076	11.20 ***	0.212	12.38 ***	0.076	7.80 ***	0.207	8.55 ***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i)	0.046	5.47 ***	0.121	5.58 ***	0.025	2.36 **	0.060	2.29 **
정부 역할								
정부 신뢰 (j)	0.030	4.55 ***	0.078	4.80 ***	0.029	3.05 ***	0.080	3.36 ***
지역 복지정책 (k)	0.024	3.65 ***	0.062	3.75 ***	0.027	2.84 ***	0.076	3.11 ***
지역격차 인식								
격차인식 (l)	-0.022	-3.39 ***	-0.061	-3.86 ***	-0.002	-0.21	-0.016	-0.61
[교호작용] 감소지역의								
(a)×(b) 근로 여건					0.014	1.07	0.042	1.25
(a)×(c) 소득·소비 여건					-0.012	-0.95	-0.016	-0.48
(a)×(d) 주거환경 여건					0.012	0.89	0.030	0.89
(a)×(e) 문화·여가 여건					-0.012	-0.89	-0.039	-1.18
(a)×(f) 의료서비스 여건					-0.011	-0.84	-0.041	-1.09
(a)×(g) 지역안전도					-0.004	-0.32	-0.011	-0.34
(a)×(h) 자연환경 여건					-0.001	-0.08	0.007	0.22
(a)×(i) 사회적 관계					0.048	3.57 ***	0.149	4.16 ***
(a)×(j) 정부 신뢰					0.000	0.01	-0.005	-0.16
(a)×(k) 복지정책					-0.006	-0.49	-0.026	-0.77
(a)×(l) 격차인식					-0.036	-2.73 ***	-0.076	-2.25 **
Sigma Coef.	-1.393	-153.0 ***	-1.310	-142.5 ***	-1.395	-153.2 ***	-1.308	-142.2 ***
Pseudo-R ² [‡]	25.82%		65.58%		33.69%		66.44%	
Sample Size	5,913							

[†] Model뒤에 e가 붙은 모형은 log-log모형으로 탄력성(elasticity)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임. Coef.는 각 변수의 계수값임.

[‡] Sig. Level (유의수준): ***(<.01), **(<.05), *(<.10), Pseudo-R²는 Nagelkerke기준(Nagelkerke, 1991) 사용.

^{††} Reference Groups (변수별 참조집단): "성별"은 여성, "연령"은 60대 이상, "혼인 여부"는 배우자 없음,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 "주택유형"은 아파트 외, "점유형태"는 자가 외, "지역"은 동지역, "(인구)감소지역"은 비인구감소지역 임.

개별 지역단위 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관점에서는 소득 및 일자리 관련 요인이 정주지속성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 특히 근로여건과 소득·소비 여건 만족도가 1% 증가할 경우, 정주지속성은 각각 약 0.09%와 약 0.06%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보다 낮은 경제 정책 효과를 보여주지만, 기존 연구에서도 여러 요인을 함께 통제할 경우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GAMLSS는 일종의 선형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의 탄력성은 로짓계열 탄력성보다 선형모형 탄력성이 낮았고, 선형모형으로 추정한 이희창(2004)의 지역경제 탄력성이 0.13%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 <부록 2>의 순서형 로짓 결과가 정주지속성의 오즈(odds)를 각각 약 0.31%, 약 0.14% 증가시키는 것으로 재확인하더라도 경제적 요인의 결과는 기존연구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주거 및 생활환경 요소와 관련하여 물리적 주거환경 만족도가 1% 증가할 때, 정주지속성은 약 0.30%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존연구의 선형모형 추정 탄력성과도 거의 합치한다. 순서형 로짓모형 결과로 확인하면 약 0.83 정도로 조금 높는데, 기존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합한 범위인 약 0.62보다 조금 높고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단순로짓으로 분석한 송홍수 외(2015) 연구에서 약 0.71정도까지 확인된 결과보다도 높다. 본 연구에서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검토했는데 그 중 정주지속성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요인이 물리적 주거환경 여건이다. 이를 통해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이 지역민의 기본수요(basic needs)를 충족시키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정주지속성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화·여가 만족도의 탄력성 역시 평균 ± 1 ·표준편차 범위보다 조금 높은 약 0.15수준이며, 이는 이지은·이경은(2020) 연구(탄력성 약 0.14)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다만 순위로짓 결과로는 약 0.33으로 기존연구 로짓결과의 범위에 합치하는 수준이다. 의료서비스 여건의 탄력성은 약 0.14정도로 나타났는데, 기존연구 중 선형모형으로 추정할 수 있는 탄력성 값은 없어 직접비교는 어려웠다. 다만 본 연구의 순위로짓 결과상 약 0.34의 탄력성이 확인된 점을 기준으로 기존연구 전체의 평균(0.26)과 분산(0.30)을 감안하면 이해 가능한 범위다. 다만 춘천의 전 연령을 표본으로 단순 프로빗모형으로 분석한 이향미(2019)의 탄력성이 약 0.61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지역안전 만족도의 탄력성은 약 0.19로 확인되는데 기존연구와 합치하는 수준이며 꽤 높은 탄력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지역안전에 대한 정책이 정주지속성에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연환경 여건 만족도의 정주지속 탄력성은 약 0.21정도로 물리적 주거환경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존 연구에서 자연환경을 감안한 선형모형의 탄력성은 확인하기 어려워, <부록 2>에 첨부한 로짓 모형의 탄력성 결과와 비교한다. 순서형 로짓 모형의 탄력성은 약 0.57인데,

기존연구의 평균(0.67)과 분산(0.69)을 감안하면, 적절한 결과로 추정된다. 사회적 관계가 좋을 수록 정주지속성도 증가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한 탄력성은 약 0.12였다. 정부신뢰와 지역복지정책 탄력성은 각각 약 0.08과, 약 0.06 수준이다.

지역 격차인식 요인은 본 연구의 중심가설을 확인하는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격차 인식이 1% 증가할 때 정주지속성이 0.06% 감소하며 1% 수준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는 주거환경의 물리적 차이와, 문화·의료·안전 등 실질적인 사회 시스템의 차이뿐만 아니라, 격차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정주지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실증적 근거를 확인한 것이다. Stark(1978, 1991)가 절대적 격차인식보다는 상대적 격차인식이 이촌향도의 주거이동을 유발한다는 NELM 주장을 한국의 정주지속성 측면에서 재확인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정주지속성에 관한 결과는 절대적 차이(실질적 낙후)와 상대적 차이(격차) 모두 정주지속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리적 공간개선과 사회시스템 개선도 정주지속성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거주민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정책도 중요하다 해석할 수 있다.

앞서 확인한 결과는 <모형 1>과 <모형 1e>를 기반으로 전체 표본의 지역단위 요인과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를 해석한 것이다. 이 두 모형에서 인구감소지역 여부 더미(a)가 정주지속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감소지역이 비감소지역에 비해 앞서 서술한 통제변인으로서 개별가구특성 변수들과 지역단위 변수들로 설명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정주지속성 관련(감소) 요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소지역과 비감소지역 간의 정주지속성 요인을 보다 깊이 확인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더미(a)와 기타 지역단위 요인들 간의 교호항을 포함한 <모형 2>와 <모형 2e>로 분석했다. 이 결과로 지역단위 요인과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를 인구감소지역(식 3)과 비인구감소지역(식 4)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정리하면 아래 <표 6>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별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귀무가설이 각 변수의 계수가 0이라는 것으로, 귀무가설을 10% 수준에서 기각하지 못한다면 0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으로 앞서 언급한 <식 3, 4>를 활용해 재산정했다.

교호항을 포함한 모형(표 5)의 경우 (인구)감소지역(a)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감소지역 변수를 제외한 변수들로 정주지속성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지역단위 요인들과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를 감소지역과 비감소지역을 구분하여 쉽게 비교하기 위해 정리된 <표 6>의 결과로 해석한다. 지역단위 여러요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교호항은 사회적 관계와 지역격차 인식이 유일했다. 다른 요인들, 즉, 소득 및 일자리, 주거 및 생활 환경, 자연환경과 정부역할 등 지역단위 요인들은 감소지역과 비감소지역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값도 <표 5>의 <모형 1>과 <모형 1e>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표 6〉 감소·비감소 지역의 정주지속성 결정요인 총효과(직접효과+교호작용 효과)

변수 [†]	비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Model 2 Coef.	Model 2e Elasticity	Model 2 Coef.		Model 2e Elasticity	
소득 및 일자리						
근로 여건 (b)	0.029 ***	0.066 ***	0.029 *** + 0.014 =	0.029	0.066 *** + 0.042 =	0.066
소득·소비 여건 (c)	0.031 ***	0.070 ***	0.031 *** + -0.012 =	0.031	0.070 *** + -0.016 =	0.070
주거 및 생활 환경						
주거환경 여건 (d)	0.104 ***	0.281 ***	0.104 *** + 0.012 =	0.104	0.281 *** + 0.030 =	0.281
문화·여가 여건 (e)	0.062 ***	0.177 ***	0.062 *** + -0.012 =	0.062	0.177 *** + -0.039 =	0.177
의료서비스 여건 (f)	0.054 ***	0.155 ***	0.054 *** + -0.011 =	0.054	0.155 *** + -0.041 =	0.155
지역 안전도 (g)	0.079 ***	0.201 ***	0.079 *** + -0.004 =	0.079	0.201 *** + -0.011 =	0.201
자연 환경						
자연환경 여건 (h)	0.076 ***	0.207 ***	0.076 *** + -0.001 =	0.076	0.207 *** + 0.007 =	0.207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i)	0.025 ***	0.060 ***	0.025 ** + 0.048 *** =	0.073	0.060 ** + 0.149 *** =	0.209
정부 역할						
정부 신뢰 (j)	0.029 ***	0.080 ***	0.029 *** + 0.000 =	0.029	0.080 *** + -0.005 =	0.080
지역 복지정책 (k)	0.027 ***	0.076 ***	0.027 *** + -0.006 =	0.027	0.076 *** + -0.026 =	0.076
지역격차 인식						
격차인식 (l)	-0.002	-0.016	-0.002 + -0.036 *** =	-0.036	-0.016 + -0.076 ** =	-0.076

[†] 비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특성변수들의 교호작용은 0가 되어 직접효과만 해당하는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직접효과와 교호작용을 합한 값이 총효과임.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만 합한 값임.

[‡] Sig. Level (유의수준): ***(<.01), **(<.05), *(<.10).

사회적 관계의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모두 정주지속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그 탄력성은 감소지역(약 0.21)이 비감소지역(약 0.07)에 비해 월등히 컸다. 그 원인을 본 실증분석 결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기존 연구 중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와 농촌의 정주지속성 요인을 비교한 고은아(2023)에 따르면 농촌의 지역관계만족도의 정주지속성의 탄력성(약 0.40***)이 큰 것에 반해 도시(약 -0.09)는 음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았던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공주, 보령, 논산을 제외한 6개 지자체가 모두 군 지역으로 농촌이 많은 반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포함된 농촌은 홍성군이 유일하다. 도시보다는 농촌적 삶에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가 정주지속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충남지역에 한정된 연구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 향후 다른 지역 연구나 전국 단위의 연구로 추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지역격차 인식의 경우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했는데, 비감소지역은 지역격차인식이 정주지속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정주지속성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게다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격차인식 탄력성은 약 -0.08로 〈모형 1e〉의 전체 모형 탄력성(-0.06)보다 절대값이 더 크다. 이는 인구 감소지역과 비감소지역을 모두 표본에 포

함하여 분석하면 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비감소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더 작게(절대값) 나타난 것이고, 실제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인구감소지역 보다는 정책초점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격차인식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주지속성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격차인식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나누어 청년(20-30대), 중년(40-50대), 노년(60대 이상)의 정주지속성 결정요인을 추정했다(표 7). 흥미로운 점은 물리적 주거환경과 정주지속성 간의 탄력성이 비인구감소지역 청년(약 0.39)에 비해 인구감소지역 청년(약 0.70)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이웃이나 친구와의 관계로 해석되는 사회적 관계는 보통 청년 보다는 노령층의 정주지속성과 관련성이 더 높고 도시 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실증데이터로 확인한 것은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관계와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감소지역의 청년은 사회적 관계와 정주지속성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탄력성도 큰편(0.31)이다.

본 연구의 핵심 가설인 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를 연령별로 나눠 비교한 결과도 흥미롭다. 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는 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하더라도, 비인구감소지역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격차인식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20-30대의 청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관련이 없었다. 탄력성 크기는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청년층의 경우 격차인식 탄력성이 약 -0.30으로, 1% 격차인식이 증가할 때, 청년의 정주지속성은 0.3%나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연령 중 이동이 가장 많은 시점이 청년 시기이고 그들이 느끼는 인지적 격차가 정주지속성과 관련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정책 초점을 청년층의 격차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이 비자발적 이주를 줄이고 지역의 정주지속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청년유입에만 경쟁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대응 전략의 한계를 제기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외부 유출을 줄이고 지속적인 정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정주지속성 관련 광범위한 선행연구들을

〈표 7〉 연령별 정주지속성 결정요인(GAMLSS, link function: 음이항 분포)

변수†	Model 3: 20-30대			Model 4: 40-50대			Model 5: 60대 이상		
	Coef.	t-value†	Elasticity‡	Coef.	t-value†	Elasticity‡	Coef.	t-value†	Elasticity‡
Intercept	0.275	1.40	-7.029 ***	0.588	8.44 ***	-6.291 ***	0.903	15.23 ***	-3.001 ***
[개별가구 통제변인]									
성별	0.007	0.29	0.008	-0.001	-0.12	-0.002	0.015	1.73 *	0.013
혼인여부	0.102	3.71 ***	0.123 ***	-0.006	-0.33	-0.009	-0.038	-2.47 **	-0.045 ***
교육수준: 중졸 이하	0.281	1.47	0.375 *	-0.000	-0.01	-0.018	0.002	0.23	0.001
고졸 이하	0.192	1.29	0.338 **	-0.038	-1.15	-0.054	-0.005	-0.42	-0.007
대학 이상	0.126	0.85	0.254	-0.076	-2.31	-0.102 ***	-0.018	-1.13	-0.022
소득: 100-200만원	0.049	0.62	0.033	0.025	0.71	0.034	-0.014	-1.26	-0.013
200-300만원	0.053	0.71	0.037	0.022	0.68	0.033	-0.013	-1.02	-0.007
300-400만원	0.044	0.59	0.045	0.016	0.49	0.025	-0.035	-2.24	-0.035 **
400-500만원	0.075	0.99	0.074	0.026	0.78	0.037	-0.029	-1.45	-0.035
500만원 이상	0.014	0.19	0.005	0.007	0.21	0.012	-0.035	-2.09 **	-0.036 *
주택유형: 아파트	-0.044	-1.62	-0.052 *	-0.034	-2.75 ***	-0.041 ***	-0.008	-0.66	-0.009
점유형태: 자가	-0.036	-1.40	-0.048 *	-0.003	-0.26	-0.002	0.065	4.62 ***	0.077 ***
거주기간	0.037	4.91 ***	0.111 ***	0.039	9.30 ***	0.115 ***	0.020	4.28 ***	0.064 ***
가구원수	0.015	0.40	0.009	0.011	0.64	0.021	0.033	2.11 **	0.055 **
지역: 읍	0.006	0.22	0.018	0.012	0.98	0.020	-0.011	-0.88	-0.008
면지역	-0.005	-0.16 *	-0.008	0.030	2.12 **	0.039 **	0.017	1.32	0.024 *
[지역특성]									
(인구)감소지역 (a)	-0.255	-1.74 *	-2.530 *	0.020	0.30	0.414	0.068	1.07	0.563
소득 및 일자리									
근로 여건 (b)	0.032	1.17	0.107	0.037	2.63 ***	0.095 **	0.001	0.09	-0.022
소득·소비 여건 (c)	0.066	2.37 **	0.145 **	0.041	2.86 ***	0.108 ***	-0.003	-0.24	-0.017
주거 및 생활 환경									
주거환경 여건 (d)	0.143	4.95 ***	0.389 ***	0.145	9.87 ***	0.434 ***	0.048	3.88 ***	0.100 ***
문화·여가 여건 (e)	0.071	2.80 ***	0.226 ***	0.063	4.40 ***	0.172 ***	0.034	2.29 **	0.089 **
의료서비스 여건 (f)	0.053	1.79 *	0.146 *	0.055	3.78 ***	0.145 ***	0.036	2.39 **	0.114 **
지역 안전도 (g)	0.123	4.41 ***	0.311 ***	0.077	5.70 ***	0.187 ***	0.047	3.65 ***	0.136 ***
자연 환경									
자연환경 여건 (h)	0.070	2.13 **	0.178 **	0.095	6.35 ***	0.268 ***	0.063	4.93 ***	0.150 ***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i)	-0.010	-0.30	-0.042	0.053	3.09 ***	0.135 ***	0.063	4.19 **	0.186 **
정부 역할									
정부 신뢰 (j)	0.050	1.62	0.131 *	0.035	2.52 **	0.095 ***	0.004	0.29	0.022
지역 복지정책 (k)	0.008	0.30	0.006	0.027	1.83 *	0.077 **	0.056	4.20 ***	0.174 ***
지역격차 인식									
격차인식 (l)	0.017	0.58	0.066	-0.011	-0.76	-0.046	-0.004	-0.31	-0.018
[교호작용] 감소지역									
(a)×(b) 근로	-0.003	-0.07	-0.015	0.027	1.30	0.076	0.028	1.64	0.103 **
(a)×(c) 소득·소비	0.001	0.03	0.024	-0.000	-0.02	0.018	0.002	0.15	0.013
(a)×(d) 주거환경	0.121	2.40 **	0.318 **	-0.008	-0.38	-0.055	0.020	1.27	0.067 *
(a)×(e) 문화·여가	0.004	0.09	-0.040	-0.012	-0.58	-0.025	-0.010	-0.58	-0.028
(a)×(f) 의료서비스	0.030	0.62	0.060	-0.030	-1.04	-0.078	0.004	0.20	0.012
(a)×(g) 지역안전	0.008	0.17	0.016	-0.008	-0.69	-0.037	0.019	1.19	0.031
(a)×(h) 자연환경	0.031	0.58	0.107	-0.031	-0.26	-0.027	-0.018	-1.09	-0.015
(a)×(i) 사회적 관계	0.131	2.30 **	0.312 **	-0.131	-0.01	0.004	-0.015	-0.85	-0.058
(a)×(j) 정부 신뢰	0.006	0.12	0.052	0.009	0.42	0.010	-0.000	-0.03	-0.016
(a)×(k) 복지정책	0.004	0.08	0.031	-0.006	-0.28	-0.032	0.048	2.86 ***	0.163 ***
(a)×(l) 격차인식	-0.137	-2.97 **	-0.298 ***	-0.005	-0.25	0.013	-0.027	-1.56	-0.057
Sigma Coef.	-1.143	-48.8 ***	-1.077 ***	-1.364	-100 ***	-1.287 ***	-1.662	-116 ***	-1.576 ***
Pseudo-R ² †	16.99%			32.63%			19.99%		
Sample Size	881			2,638			2,394		

† Sig. Level (유의수준): ***(<.01), **(<.05), *(<.10), Pseudo-R²는 Nagelkerke기준(Nagelkerke, 1991) 사용.

‡ 탄력성(elasticity) 추정은 log-log모형을 활용해 재추정한 값이며, t-value를 생략한 계수(Coef.)값임.

*** Reference Groups (변수별 참조집단): "성별"은 여성, "혼인 여부"는 배우자 없음,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 "주택유형"은 아파트 외, "점유형태"는 자가 외, "지역"은 동지역, "(인구)감소지역"은 비인구감소지역 임.

메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주지속성 관련 요인을 크게 경제적 측면, 주거 및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정부역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인구이동 및 정주의향에 관한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던 ‘격차인식’과 지역주민의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를 연령집단별로 검증했다. 아울러 격차인식을 포함하여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세부영역들은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상이한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고,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정주지속성 관련 요인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 소득 및 일자리와 관련된 근로여건, 소득 및 소비여건에 대한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문화·여가 만족도, 지역안전, 지역환경 여건 만족도는 모두 정주지속성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실질적 거주여건이 증가할수록 정주지속성도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각 요인과 정주지속성 간 계수(coefficients)의 부호(sign)나 통계적 유의성은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에서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세부적으로는 주거환경과 관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안전도, 자연환경, 문화·여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격차인식이 높을수록 정주지속성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물리적·환경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정주지속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격차인식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주지속성 제고에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정주지속성 관련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격차인식 요인이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유의미하게 크다는 점이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주민들 간 사회적 관계가 돈독할수록 정주지속성은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지역격차 인식이 높을수록 정주지속성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그러나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격차 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격차인식을 완화하는 적극적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비인구감소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은 반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30대의 청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즉, 개별가구요소와 지역 차원의 주거환경, 문화·여가, 사회복지, 의료, 교육, 지방정책 등을 통제할 경우 격차인식이 1% 증가할 때 청년층의 정주지속성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격차에 대한 인식만으로 상당히 많은 청년가구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격차 인식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과 동시에, 특히 청년층의 격차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이 지역의 정주지속성을 높이고 나아가 청년유입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정주지속성에 있어 거주 여건의 실질적 차이뿐 아니라 인식적 격차가 인

구감소지역에서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지속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시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민의 격차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물론 주민들의 격차인식을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적이고 단기간에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적어도 격차에 대한 인식이 인구감소지역의 추가적인 인구유출과 관련이 있고, 이는 다시 지방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분석 대상이 충청남도 내 15개 기초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령별 격차인식과 정주지속성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정주지속성과 격차인식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인과관계까지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즉, 격차인식이 정주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정주지속성이 격차인식에 미치는 내생적 관계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내생성 문제를 통제한 심층 분석을 통해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생활인구 혹은 관계인구의 개념의 도입과 적극적 활용은 그간 정주민구 중심의 인구감소 대응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읽힌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민의 정주지속성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최근 논의와 그 방향성이 일견 달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정주지속성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향후 인구감소대응 정책이 정주민구 중심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본 연구는 그간의 인구 ‘유입’에만 초점을 둔 정책의 한계와 거주민 유출과 같은 반작용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와 정주지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때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인구감소를 경험하는 많은 해외 도시들의 경우 인구감소를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인구감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인구 및 지역의 경제적 활력의 축소현상에 적응(smart shrinking city)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인구감소지역들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축소현상에 적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시급한 가운데, 무엇보다 인구의 유입이나 유출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실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전략임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웅·이승중·이혜림. (2020). 지방공공서비스가 욕구충족 집단별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4(3): 107-140. doi:10.18333/KPAR.54.3.107
- 고은아. (2023). 노인의 주거환경이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미치는 영향: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3(5): 801-825. doi:10.31888/JKGS.2023.43.5.801
- 김수영·오찬옥·문경주. (2017).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이 고령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3): 35-43. doi:10.6107/JKHA.2017.28.3.035
- 김영주·유병선. (2012).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8(6): 219-226.
- 김용진·김성희. (2016). 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 결정 요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5). doi:10.5762/KAIS.2016.17.5.405
- 김유하·김이선·나윤영·권송이. (2023). 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 의향을 구성하는 다차원적 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31(2): 31-63. doi:10.31324/JRS.2023.06.31.2.31
- 김정섭·신소희·구본경. (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 마을학회 일소공도
- 김지현·강수진. (2021). 서울시민의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분석. 「대한부동산학회지」, 39(3): 5-26. doi:10.37407/kres.2021.39.3.5
- 김태형. (2022).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수단이 국민의 이사의향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5(4): 371-399. doi:10.20484/klog.25.4.15
- 김형준. (2021). 거주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1인 가구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도시연구」, 11(1): 23-40. doi:10.26700/shuri.2021.4.11.1.23
- 김호·남영숙. (2017). 도시와 농촌 학생들의 지역 환경 인식이 정주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환경교육」, 30(4): 410-428. doi:10.17965/kjee.2017.30.4.410
- 김화연·이대웅. (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연구-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261-288. doi:10.21026/jlgs.2022.34.2.261
- 류영아. (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지방세논집」, 9(2): 1-23. doi:10.34241/ltr.2022.9.2.001
- 민소영·신서우. (2022). 독거노인의 정주의식을 촉진시키는 영향요인에 관한 다층모형분석 연구. 「노인복지연구」, 77(2): 33-63. doi:10.21194/kjgsw.77.2.202206.33

- 박관규·주운창. (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의 비판적 분석: 발생가능한 문제와 해결방안.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2022년3월호.
- 박다현·정해일·장한일·황정하. (2024). 농촌지역 지속거주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30(2): 205-238. doi:10.19067/jgs.2024.30.2.205
- 박인권. (2018). 사회적 약자의 삶과 지역균형발전: 역량의 지역격차 분석. 「공간과 사회」, 28(2): 71-114. doi:10.19097/kaser.2018.28.2.71
- 박진경·김도형. (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해금. (2018).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2): 163-174. doi:10.22143/HSS21.9.2.14
- 서라벌·성욱준. (2019).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질이 이주 의향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4): 199-223. doi:10.53865/KSPA.2019.02.29.4.199
- 소진광. (2020). 지역균형발전의 접근논리 탐색: 지역격차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1): 3-47. doi:10.22783/krila.2020.34.1.3
- 송홍수·임준홍·김한수. (2015). 대구 도심의 주거환경만족도와 거주의향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5): 133-141. doi:10.6107/JKHA.2015.26.5.133
- 엄창욱·노광욱·박상우. (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지역사회연구」, 26(3): 259-283. doi:10.31324/JRS.2018.09.26.3.259
- 오미영. (2008).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 327-350.
- 유나영·이기훈·마강래. (2022).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연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8(4): 19-29. doi:10.22669/krsa.2022.38.4.019
- 이경영·박관태. (2022). 지역 환경에 대한 거주민의 인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기 북부-남부의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6(2): 203-230. doi:10.22783/krila.2022.36.2.203
- 이경영·정문기·정예은. (2018).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2): 179-210.
- 이경영·정보영. (2024). 혁신도시 거주민의 지속거주의향 영향요인 연구: 핵심생산인구(만25~49세)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2(1): 109-130.
- 이경환. (2008).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주거이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3(5): 23-33.
- 이민주·백일순. (2024). 귀농귀촌, 누가 선택하는가?: 세대별 농촌 이주 의향과 영향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37(3): 73-96. doi:10.36700/KRUMA.2024.9.37.3.73

- 이재문·이한민. (2023). 전주시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과 지속적 거주의향 및 추천의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47(1): 41-51.
-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 doi:10.20484/klog.24.2.3
- 이학식·임지훈. (2017). 「SPSS24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향미. (2019).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거주의향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 간의 내생성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8): 610-617. doi:10.5762/KAIS.2019.20.8.610
- 이훈영. (2012). 「이훈영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 청람.
-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8.
- 임태경. (2024). 혁신도시 기혼 청년층의 가족동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전 입유무별·정주기간별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8(2): 229-252. doi:10.22783/krila.2024.38.2.229
- 장명준. (2024). 청년인구의 사회적 자본이 지역이동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8(7): 1624-1635. doi:10.33097/JNCTA.2024.08.7.1624
- 장인수. (2023).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 변화의 종단적 차이와 정책적 함의. 「경제와 사회」, 12-40. doi:10.18207/criso.2023..138.12
- 전영옥·박세진. (2024). 생활환경 만족도가 계속 거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역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8(3): 173-190. doi:10.20484/klog.28.3.8
- 정주원·이아라. (2022). 인구감소지역 유형에 따른 특성 분석. 「한국행정연구」, 31(3): 61-87. doi:10.22897/kipajn.2022.31.3.003
- 조명래·박배균·김동완. (2013).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전략연구2013-29). 충남발전연구원.
- 차미숙·최예슬·조은주. (202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이슈리포트」, 57. 국토연구원.
- 최민정·백일순. (2023). 영토적 틈에 걸린 지방소멸: 행정구역 중심의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토지리학회지」, 57(2): 141-163. doi:10.22905/kaopqj.2023.57.2.4
- 최일진·남황우. (2015).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8(3): 1-30.
- 한국농어민신문. (2021). 청년 유입보다 정착·자립이 중요...지역사회서 대안 찾아야.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742> (2021년 10월 29일자 기사).
- Anthony, M. J. Y., & Thurston, L. (1976). Migration Patterns and Income Change: Implications for the Human Capital Approach to Migration. *Southern Economic*

- Journal*, 42(4): 693-702. doi:10.2307/1056262
- Bhandari, P. (2004). Relative Deprivation and Migration in an Agricultural Setting of Nepal. *Population and Environment*, 25(5): 475-499. doi:10.1023/B:POEN.0000036931.73465.79
- Bolan, M. (1997). The mobility experience and neighborhood attachment. *Demography*, 34(2): 225-237. doi:10.2307/2061701
- Bowles, S. (1970). Migration as Investment: Empirical Tests of the Human Investment Approach to Geographical Mobi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2(4): 356-362. doi:10.2307/1926312
- Briggs, X. d. S. (1997). Moving up versus moving out: Neighborhood effects in housing mobility programs. *Housing Policy Debate*, 8(1): 195-234. doi:10.1080/10511482.1997.9521252
- Brueckner, J. K. (2000). A Tiebout/tax-competition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7(2): 285-306. doi:10.1016/S0047-2727(99)00086-9
- de Haas, H. (2010). Migration and Development: A Theoret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1): 227-264. doi:10.1111/j.1747-7379.2009.00804.x
- de Haas, H. (2021). A theory of migration: the aspirations-capabilities framework. *Comparative Migration Studies*, 9(1): 8. doi:10.1186/s40878-020-00210-4
- Feldman, R. M. (1990). Settlement-Identity: Psychological Bonds with Home Places in a Mobile Society. *Environment and Behavior*, 22(2): 183-229. doi:10.1177/0013916590222002
- Fernandez, R., & Rogerson, R. (1997). Keeping People Out: Income Distribution, Zoning, and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38(1): 23-42. doi:10.2307/2527406
- Galjaard, R. (2016). Coming of age: Age-friendly strategies for shrinking cities. In *Future directions for the European shrinking city*(pp. 169-179). Routledge.
- George, D., & Mallery, P. (2003). *SPSS for Windows step by step: A simple guide and reference. 11.0 update (4th ed.)*. Boston: Allyn & Bacon.
- Graeme, J. H. (1981). Village-Community Ties, Village Norms, and Ethnic and Social Networks: A Review of Evidence from the Third World. *Migration Decision Making*, 186-224. doi:10.1016/b978-0-08-026305-2.50013-9
- Harris, J. R., & Todaro, M. P.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0(1): 126-142.
- Hoxby, C. M. (1999). The productivity of schools and other local public goods producer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4(1): 1-30. doi:10.1016/S0047-2727(99)00025-0
- Lee, E. S. (196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47-57. doi:10.2307/2060063
- Leslie, G. R., & Richardson, A. H. (1961). Life-Cycle, Career Pattern, and the Decision to Mo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6): 894-902. doi:10.2307/2090574
-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 Taylor, J. E.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431-466. doi:10.2307/2938462
- McAuley, W. J., & Nutty, C. L. (1982). Residential Preferences and Moving Behavior: A Family Life-Cycle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4(2): 301-309. doi:10.2307/351540
- Michael, J. G. (1975). Research on Internal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3(2): 397-433.
- Nagelkerke, N. J. (1991). A note on a general definition of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iometrika*, 78(3): 691-692. doi:10.1093/biomet/78.3.691
- Nechyba, T. J. (1999). School Finance Induced Migration and Stratification Patterns: The Impact of Private School Vouch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1(1): 5-50. doi:10.1111/1097-3923.00002
- Nechyba, T. J. (2000). Mobility, targeting, and private-school vouchers. *American Economic Review*, 91(1): 130-146. doi:10.1257/aer.90.1.130
- Quinn, M. A. (2006). Relative Deprivation, Wage Differentials and Mexican Migration.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10(1): 135-153. doi:10.1111/j.1467-9361.2005.00306.x
- Ravenstein, E. G. (1889). The laws of migr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52(2): 241-305. doi:10.2307/2979333
- Rigby, R. A., & Stasinopoulos, D. M. (2005). Generalized Additive Models for Location, Scale and Shape.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C: Applied Statistics*, 54(3): 507-554. doi:10.1111/j.1467-9876.2005.00510.x
- Samuelson, P. A. (1954).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4): 387-389.
- Samuelson, P. A. (1955). Diagrammatic exposition of a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8: 350-356.
- Samuelson, P. A. (1958). Aspects of Public Expenditure Theo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0(4): 332-338. doi:10.2307/1926336
- Schewel, K. (2019). Understanding Immobility: Moving Beyond the Mobility Bias in

- Migration Stud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54(2): 328-355. doi:10.1177/0197918319831952
- Seek, N. H. (1983). Adjusting Housing Consumption: Improve or Move. *Urban Studies*, 20(4): 455-469. doi:10.1080/00420988320080811
- Sjaastad, L. A. (1962). The Costs and Returns of Huma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5, Part 2): 80-93. doi:10.1086/258726
- Stark, O. (1978). *Economic-demographic interactions in agricultural development: The case of rural-to-urban migration*(Vol. 6). Food & Agriculture Org.
- Stark, O. (1991). *The migration of labor*: Cambridge and Oxford: Blackwell.
- Stark, O., Micevska, M., & Mycielski, J. (2009). Relative poverty as a determinant of migration: Evidence from Poland. *Economics Letters*, 103(3): 119-122. doi:10.1016/j.econlet.2009.02.006
- Stark, O., & Taylor, J. E. (1989). Relative deprivation and international migration oded stark. *Demography*, 26(1): 1-14. doi:10.2307/2061490
- Stouffer, S. A. (1940). Intervening opportunities: a theory relating mobility and dist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845-867.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doi:10.1086/257839
- Todaro, M.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138-148.
- Woolever, C. (1992). A Contextual Approach to Neighbourhood Attachment. *Urban Studies*, 29(1): 99-116. doi:10.1080/00420989220080081
- Zipf, G. K. (1946). The P1 P2/D Hypothesis: On the Intercity Movement of Pers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1(6): 677-686.

김 상 민: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도시계획 및 정책학 박사학위(Ph.D in Policy, Planning, and Development)를 취득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참여계획,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혁신,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계획 및 정책 등이다. 최근의 논문으로 “Are small cities disappearing? The policy responses to urban shrinkage oriented toward young people in Uiseong-gun, South Korea”(Cities, 2024), “인구와 경제를 고려한 도시축소(urban shrinkage) 진단 및 유형별 사회경제적 특성분석”(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23) 등이 있다(sangminkim@cnu.ac.kr).

이 성 원: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 in Regional Planning)를 취득하고,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이며, 구체적으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혁신적 지역성장, 스마트시티, 주택정책 등 여러 공간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 “Toward greener transit: Carbon-efficient density thresholds for public transit vs. private vehicles”(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2025), “상점 입지는 여전히 중요한가?: 강릉시 집적경제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2021), “Comparing the impacts of local land use and urban spatial structure on household VMT and GHG emissions”(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2020), 등이 있다(sw10906@gwnu.ac.kr).

〈부록 1〉 정주지속성 결정요인별 계수값(Coef.) 및 탄력성[†]

기존 연구	지역	대상	시점	표본수	독립변수	모형	Coef.	탄력성 [†]
[삶의질]								
박다현 외(2024)	연천	청년	2022	309	삶의 만족도	Regression	0.37 ***	0.3236
유나영 외(2022)	전국	성인 전체	2021	600	생활 만족도	Binary Logit	0.9776 ***	0.9243
전영옥·박세진(2024)	무주	성인 전체	2022	572	지역 만족도	2SLS	0.603 ***	0.8135
[소득 및 일자리]								
강영웅 외(2020)	전국	성인 전체	2019	6,671	지역경제	Binary Logit	0.10 **	0.1066
김화연·이대웅(2022)	강원	출신-거주 O	2021	165	일자리인프라	Binary Logit	0.1327	0.1457
유나영 외(2022)	전국	전체	2021	600	일자리	Binary Logit	-0.894	-0.1219
이경영 외(2018)	서울	전체	2017	750	경제성	Binary Logit	0.4090 ***	0.1804
이항미(2019)	춘천	가구주	2017	1,000	직장만족	Binary Probit	0.608 ***	0.6155
이희창 외(2004)	경기	영주의사성인	2002	1,727	지역경제	Regression	0.129 ***	0.0826
전영옥·박세진(2024)	무주	성인 전체	2022	572	일자리만족도	2SLS	0.430 ***	0.2692
[주거 및 생활환경: 주거환경 여건]								
고은아(2023)	전국	노인	2020	8,878	주거환경만족	Binary Logit	0.485 ***	0.6874
김수영 외(2017)	부산	성인 전체	2015	5,324	주거만족도	PROCESS macro (직접+간접 효과)	0.473 *** 0.050 ***	0.2364
김형준(2021)	부산	성인 전체	2019	33,004	주거만족도	Ordered Logit	0.264 ***	0.6707
김화연·이대웅(2022)	강원	출신-거주 O	2021	165	주거환경만족	Binary Logit	-0.176	-0.1934
박병훈·정의철(2022)	서울	가구주	2017	19,958	주거생활환경	Binary Logit	0.049 *	0.0118
송홍수 외(2015)	대구	도심주거	2015	160	시설편리요인	Binary Logit	0.712 **	0.3526
이경영 외(2018)	서울	전체	2017	750	주거쾌적성	Binary Logit	0.363 ***	0.1601
이선영·박상희(2020)	양천	노인(60이상)	2018	300	건물·외부공간	Regression	0.249 ***	0.3824
이지은·이경은(2020)	서울	전체	2018	20,000	생활환경	Regression	0.082 ***	0.0767
이항미(2019)	춘천	가구주	2017	1,000	거주만족도	Binary Probit	-0.229	-0.3398
이희창 외(2004)	경기	영주의사성인	2002	1,727	생활환경	Regression	0.026	0.0166
전영옥·박세진(2024)	무주	성인 전체	2022	572	기반시설만족	2SLS	0.430	0.0953
정찬우·한창근(2021)	전국	노인	2017	9,798	주거환경만족	Binary Logit	0.085 ***	0.1023
[주거 및 생활환경: 문화·여가 여건]								
김수영 외(2017)	부산	성인 전체	2015	5,324	문화시설만족	PROCESS macro	0.0373 **	0.0293
김형준(2021)	부산	성인 전체	2019	33,004	문화시설만족	Ordered Logit	0.099 ***	0.2088
김화연·이대웅(2022)	강원	출신-거주 O	2021	165	문화여가체육	Binary Logit	0.2570	0.3106
유나영 외(2022)	전국	성인 전체	2021	600	인프라·문화	Binary Logit	-0.023 *	-0.1138
이경영·정보영(2024)	혁신	성인 전체	2023	1,515	문화체육시설	Regression	0.053	0.0446
이지은·이경은(2020)	서울	전체	2018	20,000	문화환경	Regression	0.153 ***	0.1352
이항미(2019)	춘천	가구주	2017	1,000	여가만족	Binary Probit	0.001	0.0012
전영옥·박세진(2024)	무주	성인 전체	2022	572	문화예술체육	2SLS	0.188	0.1300
[주거 및 생활환경: 의료서비스 여건]								
김화연·이대웅(2022)	강원	출신-거주 O	2021	165	보건의료환경	Binary Logit	0.0809	0.0970
유나영 외(2022)	전국	성인 전체	2021	600	인프라·문화	Binary Logit	0.0898	0.0741
이항미(2019)	춘천	가구주	2017	1,000	의료만족도	Binary Probit	0.397 **	0.6066

기존 연구	지역	대상	시점	표본수	독립변수	모형	Coef.	탄력성 [†]
[주거 및 생활환경: 지역안전도]								
김화연·이대웅(2022)	강원	출신-거주 O	2021	165	안전환경만족	Binary Logit	-0.368	-0.4806
박병훈·정의철(2022)	서울	가구주	2017	19,958	안전심각	Binary Logit	-0.028 **	-0.0005
송홍수 외(2015)	대구	도심주거	2015	160	안전환경요인	Binary Logit	1.9388 ***	1.5317
이경영 외(2018)	서울	전체	2017	750	청결·안전	Binary Logit	0.4820 ***	0.2126
[자연환경]								
강영웅 외(2020)	전국	성인 전체	2019	6,671	(자연)환경	Binary Logit	0.14 ***	0.1784
김수영 외(2017)	부산	성인 전체	2015	5,324	공원	PROCESS macro	0.0192	0.0149
김화연·이대웅(2022)	강원	출신-거주 O	2021	165	자연환경만족	Binary Logit	0.8036 **	1.1513
송홍수 외(2015)	대구	도심주거	2015	160	조경	Binary Logit	0.3720	0.0744
이희창 외(2004)	경기	영주의사성인	2002	1,727	생태환경	Regression	0.068 *	0.0200
전영욱·박세진(2024)	무주	성인 전체	2022	572	농림축산만족	2SLS	*	0.0008
[사회적 자본]								
고은아(2023)	전국	노인	2020	8,878	지역관계만족	Binary Logit	0.033 *	0.0460
					사회활동참여		0.047	0.0211
					이웃교류		-0.094 ***	-0.1255
김형준(2021)	부산	성인 전체	2019	33,004	지역소속감	Ordered Logit	0.873 ***	1.8298
박병훈·정의철(2022)	서울	가구주	2017	19,958	이웃신뢰	Binary Logit	0.1970 **	0.0340
					이웃신뢰보통		0.1250 ***	0.0266
이경영 외(2018)	서울	전체	2017	750	사회적 자본	Binary Logit	0.3920 **	0.1729
장명준(2024)	대구	청년	19-20	3,861	신뢰	Binary Logit	0.1990 ***	0.0565
					참여		0.1100 *	0.0312
					네트워크		-0.048	-0.0136
정찬우·한창근(2021)	전국	노인	2017	9,798	사회활동만족	Binary Logit	0.126 ***	0.1314
					사회활동빈도		-0.042 ***	-0.0478
[정부역할]								
강영웅 외(2020)	전국	성인 전체	2019	6,671	지방행정	Binary Logit	0.29 ***	0.3696
김화연·이대웅(2022)	강원	출신-거주 O	2021	165	청년정책만족	Binary Logit	0.2245	0.2857
이희창 외(2004)	경기	영주의사성인	2002	1,727	지방정부대응	Regression	0.067 *	0.0429
[격차]								
유나영 외(2022)	전국	성인 전체	2021	600	기회격차	Binary Logit	-0.316 **	-0.3635

[†] 마지막 열은 기존 연구들 중 정주지속성과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탄력성으로 재추정한 값이다. 탄력성 열 바로 앞 열(Coef.)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계수값과 통계적 유의성(유의수준: ***(<.01), **(<.05), *(<.10))을 표기한 것이며, 탄력성은 제시된 계수값과 각 논문에서 제시한 기초통계값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계산한 값.

[‡] linear 계열 모형(SEM 포함)은 $\beta \cdot \text{xbar}/\text{ybar}$ 로 환산한 탄력성 값이며, log-linear 모형은 $\beta \cdot \text{xbar}$, linear-log모형은 β/ybar 값으로 추정함. logit이나 probit 계열의 탄력성은 종속변수를 선택할 확률을 p라고 할 때, $\beta \cdot \text{xbar} \cdot (1-p)$ 로 탄력성을 산정함.

〈부록 2〉 정주지속성 결정요인(Ordered Logit Analysis)

변수 [†]	Model A1 [‡]				Model A2 [‡]				Model A3 [‡]			
	Coef.	OR	Elast.	t-value [‡]	Coef.	OR	Elast.	t-value [‡]	Coef.	OR	Elast.	t-value [‡]
[개별가구 통제변인]												
성별	0.048	1.05	0.020	0.94	0.080	1.08	0.034	1.52	0.066	1.07	0.028	1.26
연령: 20대	-1.508	0.22	-0.059	-10.5 ***	-1.224	0.29	-0.048	-8.25 ***	-1.257	0.28	-0.049	-8.45 ***
30대	-0.942	0.39	-0.075	-8.59 ***	-0.641	0.53	-0.051	-5.67 ***	-0.654	0.52	-0.052	-5.77 ***
40대	-0.815	0.44	-0.136	-9.17 ***	-0.579	0.56	-0.097	-6.32 ***	-0.569	0.57	-0.095	-6.20 ***
50대	-0.545	0.58	-0.103	-6.91 ***	-0.406	0.67	-0.077	-4.99 ***	-0.397	0.67	-0.075	-4.86 ***
혼인여부	0.115	1.12	0.071	1.42	0.099	1.10	0.060	1.19	0.077	1.08	0.047	0.93
교육수준: 중졸 이하	-0.071	0.93	-0.006	-0.73	0.011	1.01	0.001	0.11	0.030	1.03	0.003	0.29
고졸 이하	-0.327	0.72	-0.083	-3.64 ***	-0.167	0.85	-0.042	-1.78 *	-0.153	0.86	-0.039	-1.62
대학 이상	-0.504	0.60	-0.152	-4.98 ***	-0.413	0.66	-0.125	-3.93 ***	-0.388	0.68	-0.117	-3.68 ***
소득: 100-200만원	-0.164	0.85	-0.022	-1.65 *	-0.191	0.83	-0.026	-1.84 *	-0.167	0.85	-0.023	-1.60
200-300만원	-0.204	0.82	-0.027	-1.94 *	-0.254	0.78	-0.034	-2.32 **	-0.236	0.79	-0.031	-2.14 **
300-400만원	-0.287	0.75	-0.036	-2.58 **	-0.376	0.69	-0.047	-3.25 ***	-0.357	0.70	-0.044	-3.06 ***
400-500만원	-0.266	0.77	-0.025	-2.22 **	-0.275	0.76	-0.026	-2.20 **	-0.253	0.78	-0.024	-2.01 **
500만원 이상	-0.208	0.81	-0.047	-1.88 *	-0.404	0.67	-0.091	-3.45 ***	-0.387	0.68	-0.087	-3.29 ***
주택유형: 아파트	-0.201	0.82	-0.072	-3.20 ***	-0.249	0.78	-0.089	-3.79 ***	-0.244	0.78	-0.087	-3.69 ***
점유형태: 자가	0.157	1.17	0.098	2.36 **	0.038	1.04	0.023	0.55	0.043	1.04	0.027	0.63
거주기간	0.263	1.30	0.906	12.16 ***	0.262	1.30	0.903	11.83 ***	0.259	1.30	0.894	11.66 ***
가구원수	-0.025	0.98	-0.036	-0.29	0.056	1.06	0.082	0.63	0.063	1.06	0.091	0.70
지역: 읍	0.146	1.16	0.033	2.23 **	0.041	1.04	0.009	0.61	0.054	1.06	0.012	0.80
면지역	0.392	1.48	0.117	5.85 ***	0.263	1.30	0.079	3.64 ***	0.272	1.31	0.081	3.73 ***
[지역특성]												
(인구)감소지역 (a)	-0.023	0.98	-0.009	-0.42	-0.080	0.92	-0.033	-1.40	-0.059	0.94	-0.024	-1.03
소득 및 일자리												
근로 여건 (b)					0.386	1.47	0.309	7.09 ***	0.270	1.31	0.216	3.53 ***
소득·소비 여건 (c)					0.175	1.19	0.140	3.27 ***	0.208	1.23	0.167	2.74 ***
주거 및 생활 환경												
주거환경 여건 (d)					1.035	2.81	0.828	18.83 ***	0.898	2.45	0.718	11.74 ***
문화·여가 여건 (e)					0.406	1.50	0.325	7.84 ***	0.431	1.54	0.345	5.66 ***
의료서비스 여건 (f)					0.421	1.52	0.337	8.12 ***	0.428	1.53	0.342	5.40 ***
지역 안전도 (g)					0.806	2.24	0.645	15.08 ***	0.773	2.17	0.618	10.45 ***
자연 환경												
자연환경 여건 (h)					0.706	2.03	0.565	12.94 ***	0.659	1.93	0.527	8.47 ***
사회적 자본												
사회적 관계 (i)					0.561	1.75	0.449	8.42 ***	0.339	1.40	0.271	4.10 ***
정부 역할												
정부 신뢰 (j)					0.226	1.25	0.180	4.35 ***	0.188	1.21	0.150	2.49 **
지역 복지정책 (k)					0.212	1.24	0.170	4.05 ***	0.292	1.34	0.234	3.80 ***
지역격차 인식												
격차인식 (l)					-0.156	0.86	-0.125	-3.04 ***	0.085	1.09	0.068	1.09
[교호작용]												
(a)×(b) 근로									0.211	1.24	0.087	2.02 **
(a)×(c) 소득·소비									-0.070	0.93	-0.029	-0.67
(a)×(d) 주거환경									0.274	1.31	0.112	2.60 ***
(a)×(e) 문화·여가									-0.024	0.98	-0.010	-0.23
(a)×(f) 의료서비스									-0.056	0.95	-0.023	-0.54
(a)×(g) 지역안전									0.118	1.13	0.048	1.11
(a)×(h) 자연환경									0.109	1.12	0.045	1.03
(a)×(i) 사회적관계									0.504	1.66	0.207	4.65 ***
(a)×(j) 정부신뢰									0.084	1.09	0.035	0.81
(a)×(k) 복지정책									-0.137	0.87	-0.056	-1.31
(a)×(l) 격차인식									-0.451	0.64	-0.185	-4.33 ***
Pseudo-R ² [‡]	21.42%				34.80%				35.49%			
Sample Size					5,913							

[†] Coef.는 각 변수의 계수값, OR은 Odds Ratio, Elast.는 평균 탄력성(elasticity) 임.

[‡] Sig. Level (유의수준): ***(<.01), **(<.05), *(<.10), Pseudo-R²는 Nagelkerke기준(Nagelkerke, 1991) 사용.

[‡] Reference Groups (변수별 참조집단): “성별”은 여성, “연령”은 60대 이상, “혼인 여부”는 배우자 없음,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하, “주택유형”은 아파트 외, “점유형태”는 자가 외, “지역”은 동지역, “(인구)감소지역”은 비인구감소지역 임.